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영양사도 채용을'

최영심 도의원, "2학기부터 시행 예정따라... 도교육청, 인건비 지원 병행돼야"

전북교육청이 유치원 학부모 급식비 부담 면제시기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37억 원 가량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각 사립유치원에 전문 영양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의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1회 추경을 통해 36억9000만원을 세우고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의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립유치원 수준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이미 9개 시·도가 사립유치원 급식비

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은 10번째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1만4000여 명에 이르는 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 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별 영양사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내 전체 160개 사립유치원 중 단 14개 사립유치원만 단독으로 영양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마저 3개소는 영양사가 겸직을 하고 있어 실제 11개 유치원만 영양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83개 사립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배치했는데, 그것도 영양사가 주1회 근무하는 곳이 51개소, 주2회 7개소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월 1회나 월 2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무시간마저도 1시간에서 5시간으로 사립유치원 내 전문 영양사의 근무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 영양사들이 주1회 근무와 월1회 근무 등 매주 1시

간만 근무하는 조건에서 식재료 품의 요구서 작성부터 식재료 검수, 식단의 영양관리,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에듀 파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영양사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에도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채용·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유치원 아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문 영양사 인력 현황에 대해 조사하거나, 근무시간 확보할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단지 교육청의 관리·감독 전담 인력만 증원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최 의원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전문 영양사도 없는 상태에서 전북교육청이 37억 원에 이르는 급식비



를 지원하겠다고 나서 탁상행정식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담임 교원에게 담임수당 13만 원, 기본급보조 46만 원씩 총 59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방과 후 전담 교원과 원장, 원감의 인건비 4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의 인건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급식비 지원에 앞서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근무 현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당장 9월부터 전문 영양사도 없는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하루빨리 사립유치원에 전문 영양사

를 확보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원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2항과 3항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급식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관내 5개까지 시설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순회 근무 시 영양사와 원장 모두 업무부실 및 태만으로 부실한 유아급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현행 법을 개정해 유치원 급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180일을 다 채우고 현재 법사위로 자동회부된 상태이다.

/김진성 기자

조동용 도의원,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이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미술분야의 경우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4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역 미술시장이 작고 법인·단체운영 여건도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신청요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연간 4회 이상의 전시회 개최 실적을 연간 2회로 낮춰 신규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 예술법인의 단체의 지정 취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인권위원 위촉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제3기 전북도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행사를 가진 뒤 위촉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지침 10월까지 개정"

6특수고용 노동자 대상 표준계약서 제·개정 마련

당정청이 오는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고용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졸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권 강화에 나선다.

당정청은 11일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공정화 법정부 대책 등 6가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체로 200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수십개 직종에 해당된다. 이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은 본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거래 과정에서 직면해 있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나온 방안은 올 10월까지 공정위가 특수고용 지침을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졸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수고용 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각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러한 대책은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산업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때문에 마련됐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주를 이뤘던 내용은 공기업의 거래관행 개선 부문이다. 당정청은 공기업 거래 개선안을 통해 공정거래 모델의 틀을 만들고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김현중 靑 안보실 2차장 美 급파

日 수출규제 조치 부담담 설득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심화되는 한일 갈등 속에 양자 간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미국의 중재를 설득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11일 북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 워싱턴 현지시각으로 10일 오전 도착했다.

김 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 깊숙이 관여해 왔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김 차장은 이번 방문 기간에도 만나 정치적 보복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담함을 적극 알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전략물자 일부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상 이슈

를 안보이슈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 차장을 워싱턴으로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 공조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풀이된다.

일본이 자국 보수언론을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증가했다는 보도를 내는 것으로 수출규제의 정당성 확보를 시도한 시점과도 맞아 떨어진다.

김 차장은 지난해 통상이슈를 안보이슈와 연계했던 미국의 사례를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던 것도 미국 방문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 지난해까지 자신의 카운터파트였던 로버트 라이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만나 일본의 통상문제와 안보이슈의 연계 시도에 대한 부담함을 강조하고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